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52호

「대전광역시회의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대전광역시회의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문장과 표현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4조 등).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서식).

### 3. 의견제출

가.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행정자치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sjulee200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회위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해”란 장애를 제외하고 질병 등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유족”이란 대전광역시의회위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공무원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대전광역시의회위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위원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 상해등보상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지급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청구자와 대전광역시의회위원장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8조(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대전광역시의회위원 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협력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llegible]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직무”라 함은 대전광역시회의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중(「지방자치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대전광역시회의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해”란 장애를 제외하고 질병 등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유족”이란 대전광역시회의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범위 안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심의 결정한 금액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	개정안
<p><u>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u></p>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p> <p>②제4조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lt;삭제&gt;</p> <p>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

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장애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으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해진 장애 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공무상 질병)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공무수행 중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7. 공무수행 중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8.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9.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10.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11.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②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③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4.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8.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